

서울고등법원

제 4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원고, 항소인 1. 주OO 외 11인

피고, 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4. 2. 선고 2013구합2960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8. 18.

판 결 선 고 2015. 9.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9. 소외 주식회사 천재교육, 두산동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미래엔, 주식회사 금성출판사, 주식회사 비상교육, 주식회사 지학사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수정사항에 대한 수정명령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0쪽 제2줄의 “떨어트리고”를 “떨어뜨리고”로, 제34쪽 제18줄의 “(18)”을 “(19)”로 각 고쳐 쓰고, 다음항에서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수정심의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태스크포스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8종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829건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마련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수정심의회 심의 없이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관철시킬 의사를 표명한데다가 태스크포스와 자문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밝히지 아니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수정심의회 심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교육부는 2013. 10. 21.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토·자문을 통해 총 829건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마련하였고, 출판사와 집필진에게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후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수정·보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에 근거하여 수정명령권을 행사할 방침이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수정심의회의 심의절차는 교과서도서용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던 점, 수정심의회는 8종의 교과서 출판사와 집필진들이 제출한 수정·보완 대조표에 대한 심의 결과 788건을 승인한 점, 피고는 그 중 41건에 대하여만 수정명령한 점(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정명령 대상은 30건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수정심의회의 심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가 태스크포스와 자문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 진행된 수정심의회의 심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당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지대운

 판사 강영훈

 판사 박창제

(별지)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1	금성출판사 368 ~ 371	<p>[본문]</p> <p>▪368 ~ 371쪽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다) : 광복이후 정부수립 과정 서술 관련</p> <p>[367쪽 하 1~2행] 반면, 이승만은 이른바 '정읍 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1946).</p> <p>[371쪽 6~12행] 1946년 2월 남한에서 신탁 통치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무렵, 북한에서는 김</p>	<p>광복 이후 정부 수립 과정을 국제연합의 결정, 남북 협상, 5·10총선거 실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북한 정부의 수립의 순으로 배치하여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필요</p> <p>① 예시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북한에서 실질적인 정부의 역할을 했음을 명시</p>	<p>[367쪽 하 1~2행] 1946년 2월 북한에서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수립되었으며, 같은 해 6월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p> <p>[371쪽 6~12행] 1946년 2월 남한에서 신탁 통치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무렵,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수립되었</p>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p><u>일성을 중심으로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수립되었다. 위원회는 친일파 처단, 토지 개혁, 중요 산업 국유화 조치 등 각종 개혁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이후 북한 정부 수립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북한에서 소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였다. 김일성이 북한 정부의 모태가 되었던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소련의 강력한 지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u></p> <p>[371쪽 8~9행] 한편, 유엔이 남한 단독 선거를 결정하자 북한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안으로는 정부 수립에 필요한 작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p> <p>[371쪽 보조단 사진 설명]</p> <p><u>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수립 경축 대회(1946. 2.) : 북한 정권의 모태가 되었던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는 1947년에 북조선 인민 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북조선 인민 위원회는 군대를 창설하는 등 국가 건설의 기반을 다진 후 1948년에 북한 정부가 수립되자 모든 권한을 정부에 이양하고 해체되었다. 사진을 통해 1946년 당시에는 북한에서도 태극기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u></p>	<p>② 예시 : 1946년 2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된 사실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와 신탁통치 문제’ 소주제의 마지막 단락(366쪽) 또는 ‘좌우 대립과 마소 공동위원회의 결렬’ 소주제의 마지막 단락(367쪽)에 서술</p>	<p><u>다. 위원회는 친일파 처단, 토지 개혁, 중요 산업 국유화 조치 등 각종 개혁 작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이후 북한 정부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북한에서 소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였다. 김일성이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하였던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소련의 강력한 지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u></p> <p>[371쪽 보조단 사진 설명] * 본문 내용을 수정하면서 중복이 생겨 사진 설명을 교체함.</p> <p><u>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수립 경축 대회(1946. 2.) : 북한에서도 1948년 정부 수립 전까지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태극기를 사용하였다.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는 1947년에 북조선 인민 위원회로 개편되었다.</u></p>
2	미래엔	[탐구활동]	제시된 자료는 6·25 전쟁의	<사료 읽기> 북한군의 전투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317	: 6·25 전쟁의 증언 - ... 동기로 본다면 인민 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들은 피차에 서로 남침과 북벌을 위하여 그 가냘픈 주먹을 들먹이고 있지 아니하였는가 ...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북한의 기습 남침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교체 필요 예시 : 정찰명령 제1호(1950.6.18.), 전투명령 제1호(1950.6.22.) 등	명령 전투 명령 제1호(1950. 6. 22.) 1. 아군(인민군 제4사단)의 공격 정면에는 적(국군)의 7사단 1연대가 방어한다. 2. 본 사단은 군단의 공격 정면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인 광동, 아장동 계선에서 적의 방어를 돌파하고, 최근 임무로서 마지리, 536.2 고지를 점령하고 최후 임무로는 평마을, 내회암을 점령한 후 차후로는 의정부, 서울 방향에 지원한다. 8. 제5보연 제2보대는 반전차포 중대와 함께 18보연의 뒤를 따라 공격할 것이며 마지리, 동명천 계선에서 전치진입을 준비한다. 9. 군단포 대대는 나의 수하대대로 한다. 포병 준비 사격은 30분간이며, 그중 15분은 폭격, 15분은 파괴 사격으로 한다. ... 포사격 준비 완료는 1950년 6월 23일 24시까지이다. 14. 사단 지휘소는 협곡이며 감시소는 (03.31)인바, 1950년 6월 23일부터 전개하며 이동축은 의정부로 통하는 도로 방향이다.
3	비상교육 346 ~ 353	[본문] ▪ 광복과 함께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 : 광복이후 정부수립 과정 서술 관련	광복 이후 정부 수립 과정을 국제연합의 결정, 남북협상,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북한 정부의 수립의 순으로 배치하여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 1946년 2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된 사실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와 우리 민족의	내용의 흐름과 시간 순서상 348쪽이나 349쪽 마지막 단락보다는 349쪽 첫 단락에 추가 서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봄. 이에 따라 353쪽의 중복되는 서술을 삭제하고 재서술함. ▪349쪽 1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을 두고 좌익과 우익이 대립하는 가운데, 1946년 2월 북한에서는 사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반응’ 소주제 마지막 단락(348쪽) 또는 ‘미·소 공동 위원회의 개최’ 마지막 단락(349쪽)에 서술	<p>실상 정부 역할을 담당한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6년 3월 미국과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를 개최하였다.</p> <p>▪353쪽 12줄 북한은 소련의 후원 아래 발족한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다.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한 이 위원회는 친일파를 축출하고,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p>
4	지학사 348 ~ 349	<p>① 346~349쪽 내용 제시 순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및 신탁 통치안 결정(346쪽) →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 및 휴회(346쪽) → 이승만의 정읍 발언(347쪽) → 좌우 합작 운동의 전개(347쪽) → 한반도 문제의 유엔 상정(348쪽) → 남북 협상 추진(348쪽) → 5·10 총선거 실시(349쪽) → 제주 4·3 사건 및 여수·순천 사건(349쪽) → 대한민국 정부 수립(349쪽) → 1946년 이후 북한의 정부 수립 과정(349쪽)</p> <p>② 349쪽 하단 북한의 정부 수립 과정 서술: 한편 북한에서는 1946년 2월에 사실상 정부 역할을 담당한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했던 이 위원회는 토지 개혁 등을 진행하였다. 남한에 앞서 국가 체제를 정비해 간 북한</p>	<p>광복 이후 정부수립 과정을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좌우합작운동, 이승만의 정읍발언, 남북협상 추진, 5·10총선거, 대한민국 정부수립, 북한 정부 수립의 순서로 배치하여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필요</p> <p>예시 : 1946년 2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된 사실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정된다.’ 소주제(346쪽)의 두 번째 문단 다음에 추가</p>	<p>① 346쪽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신탁 통치안이 결정된다’ 두 번째 문단 뒤에 연결: 이 소식이 전해지자 …… 신탁 통치를 반대하였으나, 조선 공산당 등의 좌익 세력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합의 사항을 지지하였다. 한편 북한에서는 1946년 2월에 사실상 정부 역할을 담당한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했던 이 위원회는 토지 개혁 등을 진행하였다.</p> <p>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합의 사항과 관련하여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소 공동 위원회가 열렸다(1946. 3.). (이하 교과서 원본과 동일)</p> <p>② 349쪽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두 번째 문단 수정: 남한에 앞서 국가 체제를 정비해 간 북한은 1947년에 북조선 인민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북한은 이를 기</p>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은 이듬해에 북조선 인민 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언하였다.		반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언하였다(1948. 9.).
5	천재교육 305	광복 이후 정부 수립 과정 서술	광복 이후 정부 수립 과정을 마·소공동위원회 개최, 좌우 합작 운동, 남북 협상 추진, 이승만의 정읍 발언, 5·10총선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 정부 수립의 순서로 배치하여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 1946년 2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된 사실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와 좌우 대립’ 소주제 마지막 단락(305쪽)에 추가 서술 필요	(본문에 추가 서술) 이 무렵 북한에서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조직되어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추진하였다.
6	금성출판사 373	[본문] 농지개혁 임시 인민 위원회는 일본인과 친일파 소유지, 지주 소유 토지 등을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방식으로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북한의 토지 개혁 당시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이 있었음을 서술 필요 예시 :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소작·저당이 금지되었다는 점, 1958년에 집단 농장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 【참고】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1946.3.5. 공포> 제1조 토지개혁의 과업은 일본인토지소유와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는데 있으며 토지이용권은 발같이하는 농민에게 있다. 북조선에서의 농업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은 농민의 개인소유인 농민 경리에 의한다.	* 보조단에 다음과 같은 각주를 추가함. * 무상 분배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매매, 소작, 저당이 금지되었다.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제10조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부여된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며 소작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	
7	두산동아 276	[본문] · 276쪽 (농지 개혁을 실시하다) : 1946년 3월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으로 토지 개혁을 단행하였다.……	북한의 토지 개혁 당시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이 따랐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예시 :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소작·저당이 금지되었다는 점, 1958년에 집단 농장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 【참고】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1946.3.5. 공포> 제1조 토지 개혁의 과업은 일본인토지소유와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는데 있으며 토지리용권은 발같이하는 농민에게 있다. 북조선에서의 농업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는 농민의 개인소유인 농민 경리에 의한다. 제10조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부여된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며 소작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	· 276쪽 (농지 개혁을 실시하다) (4줄) ~토지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농민들은 북한과 같은 토지 개혁을 요구하였다. → ~토지 개혁을 단행하였다. 분배된 토지는 법령에 따라 매매나 소작 또는 저당을 금지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농민들은 토지 개혁을 요구하였다. ※ 273쪽 본문 중 11줄 (본문 중 11줄) 무상 몰수·무상 분배 → ‘무상 몰수·무상 분배’ (보조단) 북한의 토지 개혁 북한의 토지 개혁의 경우,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소작·저당이 금지되었으며, 1958년에는 집단 농장화가 이루어졌다.
8	비상교육 353	[본문] ▪ 북한 정부의 수립 : 북조선 임시 위원회는 친일파들을 축출하였으며,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 개혁도 실시하였다.	북한의 토지 개혁 당시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이 따랐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예시 :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소작·저당이 금지되었다는 점, 1958년에 집단 농장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 【참고】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날개에 보충 설명을 추가함. 집단 농장화되었다는 부분은 360쪽 13줄에 서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시기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고려하여 그 제한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보충함. *북한의 토지 개혁 북한은 농민에게 분배한 토지에 대해 매매, 소작, 저당 등을 금지하여 소유권의 제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법령, 1946.3.5. 공포> 제1조 토지개혁의 과업은 일본인 토지소유와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는데 있으며 토지이용권은 발같이하는 농민에게 있다. 북조선에서의 농업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은 농민의 개인소유인 농민 경리에 의한다. 제10조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부여된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며 소작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	한을 두었다.
9	천재교육 311	1946년 3월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 개혁을 실시하고 ……	북한의 토지 개혁 당시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이 따랐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예시 :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소작·저당이 금지되었다는 점. 1958년 집단농장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	(용어 설명에 추가 서술) 토지 개혁 북한의 토지 개혁으로 분배된 토지는 매매·소작·저당이 금지되었고, 1958년에는 집단농장화가 이루어졌다.
10	금성출판사 350	[본문] 1~10행 1940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로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다. 한국광복군은 4개 지대로 구성되었는데, 1942년에는 화북으로 북상하지 않은 조선 의용대를 흡수하여 김원봉과 이범석, 김학규를 지대장으로 하는 한국광복군 1, 2, 3지대로 개편되었다.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 선전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독립 전쟁을 전개하였다. 한국광복군은 연합군과의 합동 작전에 주력하였는데,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미얀마와 인	한국광복군이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고려할 때 한국광복군 서술은 ‘동북항일연군’이나 ‘조선의용군’에 대한 서술 분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한국광복군에 대한 추가 서술 필요	본문 한국광복군 추가 서술 2. 소주제명 통합 : 349쪽 ‘■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350쪽 ‘■ 한국광복군’을 통합하여 350쪽 소주제명을 삭제하고 349쪽 소주제명을 ‘■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한국광복군’으로 수정함. 3. 350쪽 보조단에 사료 추가 : ‘대한민국 임시 정부 대일 선전 성명서’ 추가 4. 350쪽 하단의 성명서 사진 삭제하고 상단의 한국광복군 배지 사진 이동 5. 355쪽 3번 자료(대일 선전 성명서)는 본문 해석으로 통일하여 수정함. [350쪽 1~10행] 한편, 1940년 9월 대한민국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p>도 전선에서 합동 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미국의 전략 정보국(OSS)과 함께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으나, 일제가 항복하는 바람에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p>		<p>임시 정부의 군대로 <u>지청천을 사령관으로 한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다.</u> 한국광복군은 4개 지대로 구성되었는데, 1942년에는 화북으로 북상하지 않은 조선 의용대를 흡수하여 김원봉과 이범석, 김학규를 지대장으로 하는 한국광복군 1, 2, 3지대로 개편하면서 병력이 증강되었다.</p> <p><u>한국광복군은 병력을 모집하는 초모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일본군에 소속된 한인 병사나 적 후방의 한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탈출·투항하여 한국광복군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u></p> <p><u>1941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대일 선전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독립 전쟁을 전개하였다. 한국광복군은 연합군과의 합동 작전에 주력하였는데, 1943년에는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미얀마와 인도 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하여 일본군을 상대로 한 포로 심문, 정보 수집, 선전 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미국의 전략 정보국(OSS)과 함께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으나, 일제가 항복하는 바람에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u></p> <p>[대한민국 임시 정부 대일 선전 성명서(1941)] 우리는 삼천만 한인과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국,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및 기타 여러 나라가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이 일본을 격파(擊敗)시키고</p>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p>동아시아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됨을 축하하며, 이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의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였으니, 하나의 전투 단위가 되어 축심국(추축국)에 전쟁을 선언한다. 2. 1910년 병합 조약과 일체의 불평등 조약이 무효임을 거듭 선포하며, 아울러 반침략 국가가 한국에서 합리적으로 이미 얻은 권익을 존중한다. 3.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왜구를 완전히 구축(驅逐)하기 위해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혈전(血戰)한다.
11	두산동아 247 ~ 248	<p>[본문] · 247쪽 (항일 유격 전線を 벌이다)</p> <p>[본문] · 248쪽 (민족 연합 전선을 추진하다) : 항일 유격대 및 동북 항일 연군 활동과 한국 광복군 활동에 대한 서술 불균형</p>	<p>광복군 활동에 대한 서술이 본문에 거의 없으며, 생각 넓히기, 탐구활동 등에 분산 서술되어 있어 학생들이 광복군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수정 필요</p> <p>예시 : 한국광복군 활동을 독립된 주제로 본문에 서술</p>	<p>· 248쪽 (민족 연합 전선을 추진하다) (9줄) 하지만 많은 조선 의용대원들은 화북으로 이동하여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로 조직을 개편하고~</p> <p>· 248쪽 (임시 정부,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다) - 독립 주제 설정 (14줄) 1940년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 크게 강화되었다.</p> <p>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한국 광복군을 3개 지대로 확대 개편하고 미얀마 전선에 한국 광복군을 파견하였다. 창설 당시 재정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 광복군은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 국민당은 재정 지원의 대가로 한국 광복군에 대한 지휘권을 가져갔다. 대</p>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p>한민국 임시 정부는 부득이 이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지휘권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마침내 1945년 4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한국 광복군의 지휘권을 갖게 되었다.</p> <p>(생각넓히기) - 1944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중국과 교섭하여 한국 광복군 행동준수를 폐기하고 한국 광복군의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p>
12	금성출판사 407	<p>[참고 자료 및 특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의 성립 <p><더 알아보기> 주체사상의 성립과 그 역할</p> <p>~북한 학계의 주장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으로 '인간 중심의 새로운 철학 사상'이라고 한다. 주체사상은 ~ 체계화되었다. 1970년대 이후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1997년에는 ~ 사용하고 있다.</p>	<p>참고 자료의 서술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필요</p> <p>예시 : 주체사상이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이념적 도구였으며, 정치와 경제에서 북한 주민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서술</p>	<p>더 알아보기 4~9행</p> <p><더 알아보기> 주체사상의 성립과 그 역할</p> <p>~ 북한 학계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체사상은 ~ 체계화되었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1997년에는 ~ 사용하고 있다.</p>
13	두산동아 315	<p>[본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5쪽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 <p>: ... 이에 북한은 주체사상에 토대를 둔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본적인 힘으로 '조선 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웠다. 이는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어</p>	<p>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 필요</p> <p>예시① (소주제명 수정) :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 →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다"</p> <p>예시② : '생각 넓히기'에</p>	<p>(소주제명 수정)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다</p> <p>(생각 넓히기) (5줄) 그의 논점은 조선 민족이야말로 ~우월하다는 것이었다. → 그러나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 민족 제일주의'를 강조한 것</p>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p>날지 모를 사회 동요를 막고, 북한 내부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p> <p>※ 생각 넓히기 : 조선 민족제일주의로 민족 명절을 부활시키다.</p>	<p>우리식 사회주의와 민족제일주의가 북한의 주장대로 민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에 주민들을 동원해 내기 위한 정치적 수사였음을 서술</p> <p>[참고] <김정일이 민족을 강조한 이유> “조선 민족 제일주의를 단순히 우리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자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더 잘하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더욱 높이 떨치도록 하자는 데 있다.”(김일성, “조선민족 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1989)</p>	<p>은 사회주의 건설에 주민들을 동원해 내기 위한 정치적 수사였다.</p>
14	천재교육 318	자료 읽기 : ‘주체’의 강조와 김일성 우상화	<p>김일성이 주장하는 ‘주체’를 그대로 제시한 것으로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 필요</p> <p>예시 : 도움 글에 ‘주체’의 허구성과 주체사상이 김일성 우상화에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음을 서술</p>	<p>(도움 글에 추가 서술) 김일성은 이를 바탕으로 1967년 ‘주체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u>확립하였으며, 이는 김일성의 권력 독점과 우상화에 이용되었다.</u></p>
15	천재교육 329	(도움 글) 자료의 ‘우리당’이란 조선노동당을 말한다. 북한은 ~ 지향하였다. 또 외세와 남한의 통일 반대 세력을 배격하고 민족 주체의 힘으로 통일을 달성하자는 주체사상을 제기하였다.	<p>제시된 자료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 필요</p> <p>예시 : 도움 글의 “또 외세와 … 주체사상을 제기하였다.”를 삭제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 통합을 위한 체제 유지 전략이었음을 서술</p>	<p>(도움 글에서 “<u>또 외세와 … 주체사상을 제기하였다.</u>”의 문장을 삭제함)</p> <p>(도움 글에 추가 서술)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 통합을 위한 체제 유지 전략이었다.</p>
16	두산동아	[본문]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22줄) 게다가 북한에 의해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320	· 320쪽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다) : 게다가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 관계는 경색되었다.	있어 행위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의 주체에 대하여 명시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 관계는 경색되었다.
17	지학사 392	이명박 정부 수립 후에는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을 실시하여 남북 관계가 악화되었다. 더구나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 행위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의 주체에 대하여 명시	이명박 정부 수립 후 남북 관계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악화되었다. 더구나 2010년 북한이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일으켜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8	두산동아 286	[본문] · 286쪽 (북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다) : 북한은 1957년부터는 새롭게 5개년 경제 계획을 실시하였다. 경제 재건을 사상 사업과 연결한 천리마 운동으로 제1차 5개년 계획은 1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하였다.	사회주의 경제 정책의 문체점뿐만 아니라 천리마 운동의 문제점도 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 사상 의식에 호소하여 강제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한 점, 주민 생활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	(11줄)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천리마 운동은 사상 의식에 호소하여 강제적으로 동원하였고,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19	미래엔 318	[아! 그럴구나] 코너 서술 - 전쟁 중 북한군은 물론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였다. 그 진실이 밝혀진 대표적인 예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있다....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예시 : 함흥, 영광, 대전 등에서 자행된 북한의 민간인 학살 사건	전쟁 중 공권력에 의해 여러 곳에서 민간인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북한군은 함남 함흥과 전남 영광 등지에서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미군과 국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도 일어났는데, 미군에 의한 노근리 학살 사건(충북 영동)과 국군에 의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2년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거창 사건은 국가 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륜적 사건으로 '피고(국가)가 시효 소멸을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국격에도 걸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피고는 유족 박씨에게 피해 배상금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1억 1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다. 반면, 북한 정권은 전쟁 중 저지른 민간인 살상 행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20	비상교육 389	[본문] ▪ 남북의 대립 :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강조하며 북진 통일론을 주장하였다. ... 박정희 정부는 ‘선 건설, 후 통일’을 내세워 경제 발전에 주력하였으며, 강력한 반공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장면 내각 시기부터 활발히 전개되던 통일 논의는 중단되었다. 한편, 1960 ~ 1970년대 북한은 수차례의 무장 게릴라 침투 사건, ... 그 결과 남북의 긴장과 갈등은 크게 고조되었다.	통일 논의 중단 원인이 우리 정부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 “이로 인해 장면 내각 시기부터 활발하게 전개되던 통일 논의는 중단되었다.”를 ‘남북의 대립’ 소주제 마지막으로 이동	▪389쪽 5줄 박정희 정부는 ‘선 건설, 후 통일’을 내세워 경제 발전에 주력하였으며, 강력한 반공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 북한도 수차례의 무장 게릴라 침투 사건,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등을 일으켜 남북간의 긴장 상황을 고조시켰다. 이로 인해 남과 북에서 전개되던 통일 논의는 중단되기도 하였다.
21	천재교육 356	~ 탈북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심각한 인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주민 인권 문제의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 언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여행·거주 이전의 자유 억압,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사례 제시	(본문 서술 보완) ~ 탈북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언론과 종교 활동 제한, 여행·거주 이전의 자유 억압, 정치범 수용소 운영, 공개 처형 등의 인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22	금성출판사 399	[본문] ▪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 개발 정책의 특징 지나친 외자 도입으로 인한 상황 부담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1997년 말에 외환 위기가 일어나는 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 심화되었다.	박정희 정부 시기 외자 도입에 따른 상황 부담과 1997년 외환 위기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므로 수정 필요 예시 : “1997년 말에 외환 위기가 일어나는 한 원인이 되었다.” 삭제	17~20행 지나친 외자 도입으로 인한 상황 부담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u>안정적인 기업 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하였다.</u> 또한, ~ 심화되었다.
23	미래엔	(고도성장과 사회·문화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	[1. 보조단에 도표 추가]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340	변화) : 단원 주제 제목 표기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 다, 고도 성장의 혜택이 편중되다, 구조적 취약성 이 심화되다~	난 위기와 문제점 중심으 로 서술하고 있고, 경제 성 장이 국민의 삶의 질과 소 득 증대에 기여한 점에 대 한 서술이 부족하므로 경 제 발전 성과에 대한 추가 서술 필요 예시 : 1인당 국민소득 증 가율, 동시대 북한과의 소 득 비교 등	 <p>▲ 여러 나라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p> <p>[2.경제 발전 성과에 대한 소주제 내용 추가]</p> <p>경제적 고도성장을 이룩하다 우리나라가 1960~1970년대 의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경제 개발의 의지가 강한 정부가 외자를 도입하여 수출 산업 을 적극 육성하고, 높은 교 육열과 근면성을 지닌 국민 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였 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79년 1인당 국민 소득은 1,676달러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 작된 1962년 87달러에 비해 무려 19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경 제 성장률은 선진국을 비롯 한 주변 국가들보다 매우 높 았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 가난에 시달리 던 국민의 생활이 크게 윤택 해졌다.</p> <p>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다 그러나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 경에 시달렸고, 빈부의 차이 도 커졌다. 또 지역 간 개발 불균형 및 도시와 농어촌 간 의 소득 격차 확대도 문제였</p>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p>다. 한편, ~~</p> <p><남북한 1인당 국민 총생산 비교> 도표와 설명은 350쪽에 있음.</p>
24	금성출판사 55	<p>[지도.도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지도 中 천리장성 위치 및 표현법 	<p>①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고려의 천리장성과는 달리 성벽이 길게 이어져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므로 수정 필요</p> <p>예시 : 성곽 표시를 삭제하고 점선 등으로 표시</p> <p>②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천리장성은 동북 기점이 '부여성', 서남 종점은 '해(海·바다)'이며, 그 길이가 천여 리에 달한다고 제시되어 있음. 서남 종점인 '해(海·바다)'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요동반도의 끝 다렌(비사성)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므로 수정 필요</p> <p>예시 : 천리장성의 서남 출발점을 요동반도의 비사성으로 수정</p>	<p>성곽 표시를 삭제하고 점선 등으로 표시, 천리장성의 서남 출발점을 요동 반도의 비사성으로 수정</p> <p>* 지도 하단에 추가할 내용 천리장성은, 현재의 부여성에서 랴오허 강 하구까지 토축 성벽을 축조하였다는 설, 오늘날 랴오닝 성 시평 성자산산성에서 랴오동 반도 남단인 다렌 대흑산산성(비사성) 사이에 있었던 기존 산성을 연결하였다는 설이 있다.</p> <p>* 사진 설명 추가 : 득리사산성 위치 정보 ~~모습이다. 랴오동 반도의 비사성에서 건안성으로 나아가는 교통로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p> <p>* 지도에서 추가 수정 사항 -지도에 성자산산성 표시 -범례를 수, 당과의 전쟁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시기순으로 정렬함.</p> <p>[수와의 전쟁] 고구려의 선제 공격(598) 수의 침입과 전투지(612)</p> <p>[당과의 전쟁] 천리 장성 추정지 당의 침입과 전투지(645) 고구려의 항전</p>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25	금성출판사 70	[사진·삽화] ▪ 아프리카사브 궁전 벽화의 고구려 사진	아프리카사브 궁전 벽화의 조우관을 쓴 두 인물이 고구려 사진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 ‘고구려 사진으로 추정됨’	아프리카사브 궁전 벽화의 고구려 사진(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 깃털이 달린 절풍을 쓰고, 고리 손잡이가 달린 큰 칼을 차고 있어서 고구려 사진으로 보고 있다.
26	금성출판사 419	[참고 자료 및 특집]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둘러싼~허구성 그러나 연합국은 1946년 1월 29일 <u>연합국 최고 사령부 지령 제677호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여</u> 한국에 반환하였다.	① 독도통합표준홍보 지침에 따라 용어 수정 필요 예시 :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u>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제677호</u> ” ②“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여~” 라는 표현이 독도가 일본 영토였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원 사료에 충실하여 수정 필요 예시 :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여…” →“독도를 통치 및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여…”	더 알아보기 5~7행 그러나 연합국은 1946년 1월 29일 <u>연합국 최고 사령부 각서 제677호로 독도를 통치 및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여</u> 한국에 반환하였다. 더 알아보기 사진 제목 연합군 최고 사령부 각서 제 677호의 부속 지도(1946)
27	미래엔 149	[탐구 활동] “자녀 균분 상속”에서 “차등 상속”으로 수정	① 제시된 도표에는 통계적으로 1750~1850년 기간에 제목과 같은 변화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상속 방식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도표 교체 필요 ② 자료를 제시할 경우 출전 표기 필요	자료 교체 <탐구 활동> 조선 시대 여성의 지위 자료 ① 여성의 재가 금지 세상의 도덕이 날로 나빠진 뒤로부터 여자의 덕이 정숙하지 못하여 사족(士族)의 딸이 예의를 생각지 아니해서 혹은 부모 때문에 절개를 잃고, 혹은 자진해서 재가하니, 한갓 자기의 가풍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실로 성현의 가르침에 누를 끼친다. … 이제부터는 재가한 여자의 자손들은 관료가 되지 못하게 하여 풍속을 바르게 하라. - “성종실록” -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p>자료 ② 재산 상속 우리 집안은 일찍이 제사의 기본 방침을 정한 지 오래되었고 사위와 외손자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정식으로 삼아 따르게 하였다. 정으로 본다면 아들과 딸은 차이가 없으나 딸은 부모 봉양과 제사가 없으니 어찌 재산을 아들과 똑같이 나눌 수 있겠는가? 딸은 삼분지일만 주어도 되니 ...</p> <p>- “부안김씨우반고문서” -</p> <p>[자료 1]과 [자료 2]를 통해 조선 시대 여성의 지위를 말해 보자. [자료 2]와 같은 재산 상속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알아보자.</p>
28	미래엔 330 ~ 332	(자유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 단원 주제 제목 표기 - 이승만 독재와 4·19 혁명, 1년 전부터 부정 선거를 준비하다. 3·15 부정 선거를 규탄하다~	소주제명이 교과서에 사용되는 용어로 부적절하므로 수정 필요 예시 :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다니!”,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 등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 →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다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 → 전두환 정부, 국민 저항에 직면하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다니 → 극단으로 치달는 강압 정치
29	비상교육 346	[참고자료·특집] ▪ 광복과 국토 분단 : 광복 직후 상황 자료 제시 - 소련 치스차코프 포고문과 미국 맥아더 포고령 단순 비교	추가된 설명글이 포고문의 실체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므로 수정 필요 예시 : 치스차코프 포고문은 표면적으로 북한 주민을 위하는 것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민위원회를 조정하며 자신들의	▪ 광복 직후의 상황 치스차코프 포고문에는 소련이 북한 주민을 위하는 것으로 표방되어 있으나, 실제로 소련은 인민 위원회를 통해 38도선 이북 지역에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미국은 38도선 이

연번	교과서 쪽수	수정명령 대상	수정명령 내용	수정된 내용
			영향력을 행사해 나간 점 등 추가 설명	남 지역에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을 견제하려는 입장이었다.
30	천재교육 255	1920년대 들어 ... 밀려 들어왔다. 한편, 이 무렵 경성방직과 같은 한국인 기업이 설립되어 ... 자본가 계층이 형성되었다.	경성방직(1919년 설립), 평양메리야스 공장(1906년 경 설립) 등을 감안하여 시간적인 선후 관계에 맞도록 수정 필요 예시 : “한편, 이 무렵 ... 한국인 기업이 설립되어” 부분을 소주제 처음으로 이동하고, “평양 메리야스 공장과 경성 방직 같은 한국인 기업이 설립되어 ... 자본가 계층이 형성되었다.”로 수정	(본문의 서술 표현 보완) <u>한편, 이 무렵 평양 메리야스 공장과 경성 방직 같은 한국인 기업이 설립되어</u> 미약하게나마 자본가 계층이 형성되었다. <u>1920년대 들어</u> 회사령이 폐지되자 일본 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하였으며, 1923년 일본과 조선 사이에 관세가 대부분 철폐되자 일본 상품이 대량으로 밀려들어 왔다.